전주 첫 마중길 조성 첫 삽 뜬다

조경공사 입찰공고… 60억 투입 전주역~명주골사거리 구간 가로숲 내년 완공

전주의 첫 인상을 바꾸고 도심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다.

전주시는 14일 전주 첫 마중길 조성을 위한 조경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첫 마중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850m 거리에 오는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 60억원이 투입해 명품 가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입찰공고를 낸 첫 마중길 조경공사는 열린녹지공간을 만들어갈 중요사업으로 가로수 식재, 수목 부대시설 등을 갖춰 백제대로를 전주의 대표적 생태·문화거리로 변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공사는 총액입찰 공사로 전라북도 업체에 한해 전자입찰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장기계속공사이다.

시는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이미지 향상과 주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첫 마중길에 버스킹 공연장과 야외컨벤션을 조성,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벤치와 파고라, 보행광장, 화장실 등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도 설치된다.

시는 시는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민선 6기 전주시의 중점사업인 첫 마중길이 조성되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도시 전주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KTX 등 열차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첫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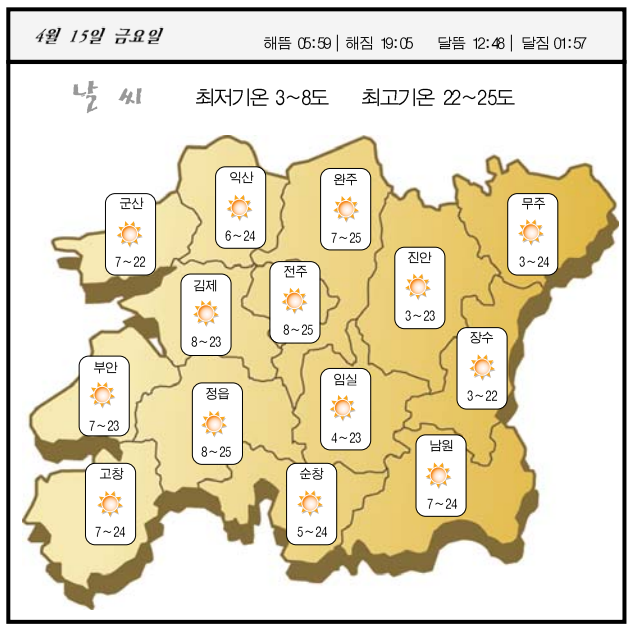
이와 함께 시는 풍남문에서 전라감영을 거쳐 풍패지관(객사)까지 이어지는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다음 주 공고를 내고 해당 구간을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의 중심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인도가 부족했던 이곳에 한옥마을과 같은 분위기의 인도를 설치하고, 차도는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등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람의 도시 전주는 문화와 생태를 사람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전주의 도시재생은 전주민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 도심 구석구석에서 이뤄지기 시작했다"며 "차량과 콘크리트 중심의 도로를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로 바꿔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신임 정헌율 익산시장 선서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제8대 정헌율 익산시장의 취임식이 14일 오후 3시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신임 정헌율 익산시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관련기사 8면〉



아동권리 보호 강화한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교육

전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위상을 갖추기 위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14~15일 KT꿈품센터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장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20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대한 지침 및 아동과 권리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권리 실천방법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아동권리 친화적인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세미브더칠드런 호남지부 이민희 강사가 초청돼 갈수록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여건을 반영, 시설 종사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향상을 통한 아동권리 보호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전주시 65개 지역아동센터는 총 1700여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하거나 맞벌이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장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설 운영을 위해 오는 25일부터는 3일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전산회계 교육도 실시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20대 총선 결과 반응과 우려

노동계 "노동자-서민 뜻 담긴 심판"

20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가닥이 잡힌 데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와 서민의 뜻이 담긴 심판"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어 "이번 총선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화기와 반노동자·반서민 정책 일변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질책이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재벌-사용자 위주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과 11.14. 민중총궐기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민중의 저항이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소야대를 만든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데에 주저함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선공투본 소속 8명의 당선자에게 축하와 경의의 인사를 전한다"며 "민주노총은 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더 큰 투쟁과 더 넓은 진보정치를 만들어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여당의 총선 참패는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몬 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텃밭인 영남과 서울 강남에서조차 새누리당이 의석을 잃은 것은 지지층 조차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과 오기 정책에 신물을 느꼈다는 의미"라며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부지침 및 노동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박용주 기자

누리예산·국정교과서 '차질 불가피'

지난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 편성,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당국의 교육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누리과정 추진에 당장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진보 교육감들을 압박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도 추진해왔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전액 부담을 공약한 더민주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추진에 부담을 안을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적잖다.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것도 새누리당이 쉽사리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민의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새누리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해 반기를 들면 역사교과서 추진은 사실상 미비상태에 빠진다는 이유다. /이성주 기자

전북병무청,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

5월 27일까지 접수

전북병무청은 14일 '제6회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튼튼한 대한민국, 그 시작은 나라사랑하는 작은 마음에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도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모는 나라사랑을 상징하는 소재이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5월 27일까지이며, 전북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출품작 심사 결과는 6월 중순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시상식은 6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상, 병무청장상과 소정의 부상을 지급하고, '나만의 책자'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박용주 기자